

#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 60억원어치 이상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당 방침 따라주리라 기대, 투명신속한 진상조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0억원어치 이상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부자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김 의원에 대해 보유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당 방침을 따라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투명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팀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경제·금융 분야의 당 내외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코인 관련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많다"며 "그 부분을 충실히 해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것

이 권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두고는 "이를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언제(가상화폐를) 샀으며, 사고 파는 시점이 최고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 내용들을 사실에 붙여다 보고 파악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선 내용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날 지도부에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사를 요구한 것에는 "의견을 소명했으니 그

에 대해 지도부도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불거졌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지적에는 "해당 의혹은 일단(조사 대상자들) 특정할 수가 없고 검찰 수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조사 대상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렇듯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태구 한국감사협회장인데 두 사람은 저희가 조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尹정부 1년... 내각 인적 전면 쇄신해야"

###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 "국민 총체적 삶의 위기"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의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인데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가 그 국민의 총체적 삶의 위기다. 그 지 국민이 힘들게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출범 1년인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치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 야당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정치 복원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협력의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야당 대표와 함께 마주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尹정권 심판 위해 야 4당 힘 모아야"

### 진보당 강성희 의원

#### 尹 취임 1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진보당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전당에서 5·10 윤석열 취임 1년 진보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전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불평등한 자유, 선택적 공정성의 현장을 직시하게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 4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건설노동자 양화동 열사의 유언에 야 4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으로 인한 희생에 온 힘을 기울여 싸워야 국민에게 제대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보당은 무너지는 민생 민주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민주 개혁세력 단결의 선두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새민금잼버리 현장방문 보고회

10일부안 신재생에너지파크에서 잼버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2023새민금 세계잼버리 현장방문 보고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 정준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 등 참석자들이 잼버리 기간동안 참가자에게 사용되는 급식 및 식재료를 살펴보고 있다.

## "尹정부 1년, 모든 것이 과거로"... 도내 목회자 200명, 시국 선언

### "사회 양극화 심화"

### 에너지 정책 뒷걸음

### 일방적 외교, 경제적

### 군사적 안보 위협 요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전북 지역 200인의 기독교 목회자가 "나라 꼴이 망가지게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나섰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초교과 진보성향 목회자임을 밝힌 전북 기독교 목회자 20여명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권 규탄과 민생파탄 중단, 굴욕외교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하고 에너지·환경 정책은 뒷걸음치는 등 위기의식 없이 허둥대고 있고 한반도에 는 전염병과 같은 불안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방에 치우친 외교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경



전북지역 진보성향 기독교 목회자들이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검찰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 중단, 굴욕외교 중단"을 외치며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제적·군사적 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죽하면 취임 1년 만에 각계각층에서 퇴진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되었겠느냐.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표 유병근 목사 등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윤석

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며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들 목회자는 조만간 시국기도회를 진행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윤 정권 1년, 굴욕외교·민생파탄"... 전북서도 시국대회

전북에서도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시국대회가 열렸다.

10일 이에 따르면 전북비상사국회의 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전북시국대회를 열고 문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호기롭게 등장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동안 국민은 백 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며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을 접한 심정의

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 폐허의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무장한 검찰독재 정권의 독선이 사회 전반을 휘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에서도 한국의 이익은 오면하고 한·미·일 등맹 만을 되뇌이며 사대매국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엎고 한국 대통령이 도청 당했음에도 동맹국의 신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

다. 그러면서 "친 재벌 부자 감세로 조세 정의는 점점 멀어지고 소득 불평등은 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적 사회복지제도와 공공의료, 공적 연금의 계속 축소돼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로 몰아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출범한 전북비상사국회의추진위는 매일 한 차례 씩 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영영선 의원은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권정책회의 신설·교육 내실화를

### 영영선 도의원, 토론회 열고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영영선 의원(정읍)은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영영선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정책 현황과 도민 인권증진 방안',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가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 방향과 과제'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 정효운 전라북도인권담당관 이종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박재강 인권교육 강사가 토론자로 참석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영 의원은 "전북은 1894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형평을 주창하며 일어난 동학농민

혁명의 발원지"라고 강조하며 그 정신을 계승 세계적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인권지수 개발 인권정책회의 신설, 전북인권교육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철홍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와 임용에서 퇴직까지 직무·직급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그램 보급, 인권교육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영영선 의원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도가 인권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윤정훈 도의원, 풀무원 다논 등 찾아 현장행정

### 특례 발굴·기업규제 개선 등 애로사항 청취·해결책 모색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9일 풀무원 다논, 무주태권도원, 덕유산 리조트를 찾아 합동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이태수 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무주지역 기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풀무원 다논(주) 김화섭 공장장은 "식물성 베이스의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중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사업 확장성 등을 검토한 후 증설투자 지원가능한 투자지원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산업과는 "자연공원에 의한 인허가 완화 요구와 관련 등부권



친환경 신아관광복구 지정 특례 반영 노력을, 체육정책과는 "예산 편성 시 2024년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트레이닝 센터 운영 관련 도·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무주지역 기업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례 발굴 및 기업 규제 개선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이 촉진되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전북도에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현장 소통

### 권요안 도의원, 수소상용차 기반 구축사업 설명회 열어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완주 스포츠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수소상용차 기반 구축사업 설명회를 갖고 수소 관련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권요안 의원과 전라북도 박장석 주력산업과장 완주군 오상혁 미래전략담당관 계장,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수소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소상용차 기반 구축사업 설명회와 수소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권 의원은 "완주군이 수소산업도시와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된 만큼 전라북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수소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소 산업 성장을 위해 수소상용차의 안전성과 내구성 검증하는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가온셀 황상문 부사장은 "수소상용차 검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구축된다면 완주산업단지에 수소관련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조성되어 기업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면서 "앞으로 수소산업 인프라와 신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은 "전북도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관 기관과 기업 협력체계를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